

# 정부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시행방안 의결 국적선사 영업기반 안정화 적극 추진

정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주요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안정화 △외국인선원 고용 탄력성 확보 △해운산업 인프라 구축 △항만 생산성 제고 등 4가지다.

◇대량화물수송협의회 구축·운영=우선 국내 대량화주들이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국내 해운산업의 영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과 관련, 정부는 대량화물수송협회를 통한 대화채널 구축으로 선사와 대량화주간 신뢰회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형화주와 해운업체 및 조선소간 상호 협력을 확대, 국내 대량화물 수송에 필요한 중·장기 소요선박을 일괄 발주하는 등 운임경쟁력 확보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단계로 올 하반기에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해운업체와 대량화주 및 조선업체들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톤세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국적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 선대확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및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지정 검토=국내 해운선사들의 원가비중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한국 선원승선에 대한 법적규제가 조정될 전망이다. 노사협의를 통해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에 대해 외국인 선원 고용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선사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적 상선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의 적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선원 고용으로 국내 선원들의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필수원자재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선박에 대해 외국인 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선원비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 말까지 국가필수선대제도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선사들은 선장이나 기관장이외

선원 고용이 자유로운 선진 해운국의 선박에 비해 적당 연간 최대 25만달러의 선원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KP&I 준비금 확충  
=정부는 시행 2년을 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제도 이용을 촉진키 위해 올 하반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7월 중에 자기자본 주식분산요건을 1000인에서 30인으로, 자기자본 요건 100억원 이상 규정을 미적용하는 등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한다.

또 지급여력 부족과 시장내 낮은 신인도로 실적이 저조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 비상위험준비금 확충을 추진한다.

KP&I는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으나 국적선박의 8%만이 가입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연간 약 6800만달러의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KP&I를 비영리 법인화해 법인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 컨테이너처리 효율성 증대 위해 장기확충 지원  
=항만 하역시설 부족으로 컨테이너처리 효율성이 경쟁항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항만 하역장비 확충을 도모키 위해 입시투자세액 공제를 부여한다. 홍콩수준의 하역장비를 확충키 위해서는 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홍콩항과 센젠항은 시간당 80~107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나 부산항은 최대 7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운항이 증가될 8000TEU급 등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기항에 대비해 20열 이상 초고속 포스트 파나막스급 컨테이너크레인 설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컨테이너부두의 선석 및 장비 통합과 공동사용을 통해 전체 항만차원의 운영효율화 대책도 추진한다. 터미널 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워크샵 그룹을 구성,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 최적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항만내 선석 이용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화주의 장기 적체화물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한다.

선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의 항만내 반입 제한 및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에 대한 높은 체화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운영에 장애발생 우려시 2개월 이상 장기적체화물 강제반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해운물류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망 구축과 대형선박 투입 등 선사간 또는 항만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완화 등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부산항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전환해야

장승우 장관 부산해양포럼 강연에서 강조

---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은 이제 고효율과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전환해 외국주요항만과 경쟁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7월 29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해양포럼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센터를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재가공 화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대륙간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대륙 중계형 항만으로 나가야한다며 부산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장 장관은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터미널 운영사, 노조,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 모두가 뚜렷한 비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 하반기 중으로 부산신항과 배후단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보다 파격적인 임대요율을 설정하고 입주기업이 물류시설에 투자시 투자비만큼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상당기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공동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 일본 도쿄에서 대형화주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강화한 데 이어 동남아와 유럽까지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장 장관은 설명했다.

장 장관은 “부산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에 위치해 있고 중국·일본 항만과 거미줄 같은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상승하고 하역장비의 부족과 좁은 장치장 등으로 인해 외국 경쟁 항만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등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항만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질적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양부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정시행

급변하는 바다교통환경에 능동대처키로

전국 14개 항만에 VTS 구축, 상시운영

해양수산부는 선진관제를 위한 ‘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교역량 증가 및 정보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변하는 바다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안전확보 및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인천항 등 전국 14개 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구축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해상교통관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전기능 강화 및 항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다 선진화된 관제를 위한 『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30호)을 제정하여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제구역 및 대상선박을 확대하고, 선박 안전항행 집중 추적감시 지원과 위험경보기능, 특수선박 식별을 위한 물표관리, 고부가 정보서비스 등 선진관제를 실현함으로써 선박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항만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항만교통정보서비스(PTMS)에서 해상교통관제(VTS)로 전환해 관제구역과 대상선박을 확대된다.

또 선박 안전항행 집중 추적감시 및 지원과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인 권고, 시정지시 등 단계별 관제를 실시하고 위험경보기능, 특수선박 식별을 위한 물표관리, 정보서비스 향상 등의 선진관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항만경쟁력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덧붙여 각 지방청은 지난 5년간의 VTS 운영경험을 토대로 자체 항만실정에 맞는 세부운영 규정과 표준메뉴얼을 작성,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

층 효율적인 관제운영이 가능해졌다.

해양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 예방과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지방청에 당부했다.

또 선박의 경우 항법준수, 통신망 청취의무 이행, 무리한 항해,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지양 등 교통관계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부는 교역량 증가 및 정보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 등 급변하는 바다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종사자와 항만이용자에게 실시간 서비스와 항행정보를 제공해 선박안전과 항만교통질서를 유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항만 보안수준 매우 우수

미연안경비대 항만보안팀 실사후 호평  
국제항만보안 능력제고 협력방안 논의

미국 항만보안팀이 우리나라 항만을 시찰한 후 항만보안 상태에 대해 강평하고 있다.

미국의 항만보안팀이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상태를 시찰한 결과 보안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항만보안 전담부서인 미국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소속 항만보안팀(팀장 Michael Brown) 8명은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인천·울산·평택·군산 등 5개항의 보안상태를 시찰하고 국제항만보안 능력제고를 위한 한·미간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측이 한·미 양자간 해상보안 협력차원에서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미국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해상교역 대상국 항만을 방문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이행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방문단은 우리정부의 보안정책 및 ISPS Code 이행정도, 각종 보안 관련 시설의 구비, 항만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 화물의 검색절차, 보안관계자의 교육 및 비상훈련 현황 등 전반적인 항만보안 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미간 긴밀한 항만보안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국제회의에서 공동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국 간의 보안능력 제고를 위한 보안시설 및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오는 9월초에 우리나라 선박이 주로 기항하는 롱 비치항 등 3개 항만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방문단은 지난 7월 29일 항만보안관련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부산항 감만부두 한진 터미널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방문단의 Blair 단장은 훈련상황을 지켜본 후 "훈련수준이 매우 높아 미국도 우리나라 훈련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Best Practice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방문단의 Michael Brown 팀장은 미국을 대표해 아주 유익한 항만보안에 대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방한을 허락해준 한국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2일 동안의 해양부 및 5개 주요항만의 방문을 통해 ISPS Code의 이행상황과 해상보안에 관해 한국 항만보안

관계자와 아주 유익한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항만당국, 한국정부 등과 폭넓게 이루어진 토론의 결과로 한국이 시행중인 매우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보안제도 및 절차들을 파악하게 됐다”며 “자국의 항만보안 증진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으로 보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7월 1일 ISPS Code의 발효일 이후 미국의 국제항만보안 프로그램(International Port Security Program)에 의해 첫 번째 방문을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이 코드의 이행과 항만보안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주도국가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시스템중 첨단 CCTV, 해상교통안전 장비의 보안목적 병행활용, 환경친화적인 부두 외곽 울타리, 관계기관 간 보안장비의 공동활용 및 항만별 보안대책협의회 운영 등 우수제도나 사례는 자국시스템에 도입하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전파·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찰결과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ISPS Code를 완전 이행하고 있는 우리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자체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미국에 입항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미교역 활성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선박을 우리항만으로 유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 항만보안이 호평을 받게 된 것은 미국측의 이번 방문이 우리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지난해부터 국내제도

정비는 물론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항만보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며 “아울러 국제기준을 우리실정에 맞게 강화, 적용하고 특히 지난 6월말 일본주재 미국연안경비대의 아·태 항만보안조정관 Jung Lawrence를 미리 초청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초 국제적으로 발효된 ISPS Code는 일정기준의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항만을 기항한 선박에 대해 외국항의 입항이 거부되거나, 입항지연 등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어 향후 ISPS 이행 정도가 각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해양과학기술(MT) 개발 본격화

14개분야 10년간 총 3조1천억원 투자  
물류중심국가 건설기반구축 9900억원

해양수산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과학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해양과학기술(MT)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MT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MT 개발계획 확정 후 최근 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3개 기술축에 14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에 9900억원 ▲



해양자원과 청정에너지 개발에 1조860억원 ▲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재난 방지 등에 1조240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9900억원을 투자해 첨단 항만물류기술, 차세대 운송시스템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만5,000TEU급의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하역시스템을 개발, 항만물류산업의 일대 혁신을 이루고 초대형 해양구조물을 건설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또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해양자원과 청정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분야에도 1조860억원을 투자해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생물자원 활용기술은 수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광물자원 개발기술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태평양 심해저에 부존된 니켈, 코발트 등 전략금속자원의 국내 자급률을 크

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이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분야에도 1조240억원을 투자해 해양환경기술, 해양안전기술, 해양탐사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인공위성과 조사선, 잠수정을 이용한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능력을 확보해 육지영토의 4.5배에 달하는 EEZ 해양영토에 대한 과학적 관리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MT 개발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8년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업과 첨단 해운물류산업 발전을 통해 전통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해양생명공학산업과 해저광업 등 연간 40억불에 달하는 신(新) 해양산업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T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이 약 4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해양부는 예상하고 있다.

해양부는 MT 개발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MT 관련 첨단 연구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MT 개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다자간·양자간 국제 해양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박투자회사 3개사 잇달아 출범

동북아 3, 4, 5호 선박펀드 인가받아

동북아 3,4,5호 3개 선박투자회사가 잇달아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한국선박운용(주)가 인가신청한 동북아 3, 4, 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가받은 선박펀드들은 현대상선이 정기선 항로에 투입하게 될 68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3척에 투자된다. 이들 선박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며 오는 2006년말 인도될 예정이다.

한 펀드당 선가 8300만달러의 약 20%인 1700만달러씩 총 5100만달러를 자본시장으로부터 모집하게 되며, 나머지 70%인 5800만달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

투자자는 10년간 연 6.2%의 수익을 배당받고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주식 발행은 대우증권에서 이루어진다.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이후 총 6개의 선박펀드가 인가됐으며 동북아 1호 선박펀드는 이미 8: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나머지 5개 선박펀드들도 성공적으로 일반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약 1194억원의 선박투자자금이 조성되어 해운조선산업에 투자된다.

해양부는 “국내외 해운기업이 선박펀드를 이용한 선박확보를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다수의 선박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선박확충시 자기자금 부담비용을 줄이고 유동성의 악화없이 선복을 확대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올해들어 신조 VLCC 1척과 중고 VLCC 2척 도입에 선박펀드를 이용했으며, 이번 컨테이너선 3척까지 합해 총 6척을 선박펀드를 통해 도입한다.

### 올들어 국적선 출항정지율 크게 감소

올 상반기 외국항 출항정지 3척에 불과

올해 상반기 동안 외국항의 항만국 통제에 의해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국적선은 3척으로 지난해 동기(14척)와 비교해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국적선 출항정지를 저감대책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외국항 항만국통제에 대한 올해 상반기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국적선의 안전관리 상태가 크게 향상된데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 정도가 우수한 수준에 완전 진입했음을 입증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선박보안분야에 대한 외국항의 항만국통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선이 운항에 지장을 받은 사례 또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해양부는 그러나 유럽 및 미국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선박보안분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선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컨테이너지역개발세 2006년까지 징수

부산시, 단계적 인하뒤 폐지방안 거부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무조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단계적 인하 후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징수될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컨테이너

세에 관한 정책조정을 종결하기 위해 부산시의 입장제출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종결의견에서 재정부 및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부산의 항만도로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800억원의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도 무리인 만큼 2006년까지는 현행대로 '컨'세를 징수해 항만도로를 건설하되 2007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취했다.

부산시는 해양부와 입장이 같아 이같은 방향으로 종결하는데 동의한다는 회신을 하기로 해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2006년까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말 재정부가 현재 20피트 개당 2만원인 컨테이너세를 매년 5,000원씩 인하한 뒤 2006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산시가 국고지원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재정부의 신청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과제로 선정돼 그동안 재정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부산시 등이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당초 2001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뒤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항만배후도로 건설비 조달을 위해 징수기간을 5년 연장했으며 부산시는 그동안 7,430억원을 징수했으며, 2006년까지 총 징수액은 1조 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세로 동서고가도로와 충장로 등 6개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했고, 8개 도로는 건설 중인데 2007년부터 컨테이너세가 폐지될 경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항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계량화

### BPA,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연구용역

부산항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또 항만 관련 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은 얼마나 되고, 종사자는 몇명이나 될까.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입지를 정밀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부산항이 고용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와 관련성이 많음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PA는 이에 따라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이달·중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 다음달 초 연구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BPA는 이 용역을 통해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황을 계량화하고, 부산지역 항만산업과 항만 관련 산업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정확한 집계 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산지역 항만 관련 종사자 수와 총생산액을 파악하고,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 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항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직 항만 관련 총 생산액은 물론 종사자 수마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낯선"이라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산항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상왕 장보고’ KBS TV드라마로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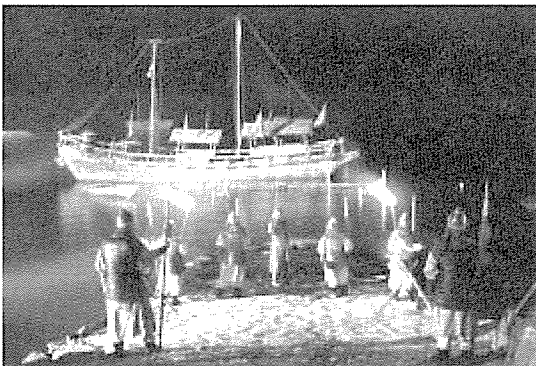
11월부터 수·목 특별기획드라마로 방영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KBS 한국방송이 제작하는 해상왕 장보고 드라마 해신 제작발표회가 8월 3일 완도에서 열렸다.

드라마 ‘해신’은 지난 2002년에 중앙일보에 1년간 연재된 최인호의 소설 해신을 원작으로 1200여년전 동북아 해상을 제패,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킨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 ‘해신’에서는 톱스타 최수종이 해상왕 장보고 역을, 장보고와 해상상권을 놓고 경쟁하는 자미부인 역에는 채시라가 출연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박영규, 이주희 등의 인기배우들이 캐스팅 됐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KBS, 전남남도, 완도군이 공동으로 제작한 완도 소세포 오픈세트장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세트장은 청해진 본영, 저자거리, 수상가옥, 망루 등 1200여년전 당시 청해진의 모습이 생생히 재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11월부터 방영될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담은 특별기획드라마 『海神』의 촬영을 위해 전남 완도에 드라마 현지세트장이 건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0년부터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해양개혁 정신 알리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드라마의 시나리오 제작을 지원하는 등 ‘해신’ 제작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번 제작발표회에도 장승우(張丞珩) 장관이 직접 참석, 축하했다.

한편 드라마 해신은 총 50부작으로 오는 11월부터 KBS 2TV를 통해 수·목 특별기획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해신 방영을 통해 바다 개혁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제2회 ‘올해의 선원’ 선정

20년이상 무사고 장기승선자 선발 포상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사·정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5일부(部) 출범 제8주년(8.8)에 즈음한 제2회 ‘올해의 선원’ 5명을 선정, 포상하였다.

‘올해의 선원’은 해외취업,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내항선 및 외항선 등 각분야별로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20년이상 무사고 장기 승선자 중 다른 선원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선원중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

해양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올해의 선원”을 선정·포상하여 선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선원직의 매력화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올해의 선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제공하는 5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올해의 선원으로 뽑인 사람들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외항선분야의 현대상선(주) 현대스타호 박상봉 조기장(25년 승선, 51세)은 '79년부터 승선생활을 시작한 이래 다년간의 승선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지원, 보수 등 사고위험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무사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했다. 또 현대상선(주)의 파수꾼 역할로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창출과 노사분규 없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끌어내어 “일등 현대맨”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해외취업 선원중에서 우수선원으로 선발된 한국선박(주) 소속 SOUTHERN FIGHTER호의 하동열 기관장(42년승선, 62세)은 우리나라 외항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며 42년 동안 무사고운항을 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외국선박의 회사 직원들에게 한국선원이 세계최고라고 인정받는데 공헌하였다. 또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송출선박에서 탁월한 인화력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우수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적인 해기사로 한국인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원양어선 부문에서 선정된 신라교역(주) 56신영호 윤의규 갑판장(32년 승선, 58세)은 '72. 7

월부터 갑판선원으로 선상생활을 시작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원양 어선원직이 힘들고 어렵다며 기피하고 있는 풍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업로 최초 개발한 해외 태평양 사모아어장의 참치기지선과 참치독항선 등 참치 연승조업선에 32년째 외곶 승선함으로써 많은 해상 근로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철저한 어획물처리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타회사 선박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등 특유의 성실함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연근해어선 삼흥실업(주) 천덕호 김태중 선장(30년 승선, 56세)은 '74년부터 후포항에서 풍치유자망 어선에서 선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통발어선의 선장에 이르기까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온갖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탁월한 업무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사고 안전운항에 기여하였다. 또 어획부진과 선원부족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사용주 단체와 협의, 외국인 선원을 후포에 유치케 함은 물론 선원 유가족들을 설득하여 사용주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준법조업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내항선 부문의 동양시멘트(주) 소속 현진호의 윤운원 갑판장(28년 승선, 59세)은 '76년 동양시멘트(주)에 입사한 이래 선령이 27년된 노후선에 장기간 승선하면서 안전운항, 갑판정비, 하역작업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일본회주가 선박을 방문하여 하역시설 및 갑판 견학시 직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친절한 응대로 시멘트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 및 외화기득에 기여하였다. 특히 '02년에는 화물하역장비의 결함을 조기 발견하여 대형 사고예방에 기여하였고 도장설비를 개선하여 선박운항 원가절감에 기여했다.

